

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_[요약본]

2017. 9. 7.

국무조정실

순서

1. 추진배경	1
2. 규제개혁 추진방향	1
3. 규제개혁 추진과제	3
① 미래 新산업 지원	
② 일자리 창출 지원	
③ 민생부담 해소	
④ 국민편익 증진	
4. 향후 추진계획	6

1. 추진배경

- 그동안 각 정부가 '규제개혁위원회'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정비 등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투자활성화, 경제활력 제고 등에 기여
 - 그러나 산업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**소상공인·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에 상대적으로 소홀**했고, **신산업·신기술 규제혁파가 시급**하다는 평가
 - 또한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의 국민 체감 **규제개혁 만족도를 제고**하고 특히 규제 측면에서 **국민의 생명·안전 보호를 강화**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
- ⇒ **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명확히 설정**하고 일관성있게 강력 추진할 필요

2. 규제개혁 추진방향

- (추진목표) **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**를 통해,
 - △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'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' 뒷받침
 - △ 일자리 창출, 민생부담 해소 등 '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'
- 추진전략
 - ① **'신산업·신기술 분야'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과감히 혁파**
 - 기존 규제방식과 다른 새로운 접근으로 '사전허용-사후규제' 방식의 **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** 추진
 - 新산업의 발전양상을 예측, 선제적으로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
 - ② **'일자리 창출'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집중 개혁**
 -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일자리 창출 기대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애로 해소
 - 서비스 산업, 경쟁제한적 규제 등 **일자리 관련 규제는 적극 혁파**
 - ③ **'민생불편과 부담'을 야기하는 규제 적극 개선, 해소**
 - 국민생활 불편 해소, 소상공인·중소기업 부담 경감,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 등을 위한 규제혁신
 - 생명·안전·환경 등 국민의 삶에 **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**

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

추진 목표

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
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

추진 전략

- ◇ 新산업·新기술 분야 규제 과감히 혁파
- ◇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
- ◇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

추진 과제 [12 + 1]

미래 新산업 지원

- ◇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
- ◇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
- ◇ 창업·벤처기업 규제 혁파

일자리 창출 지원

- ◇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개선
- ◇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
- ◇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

민생부담 해소

- ◇ 소상공인·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
- ◇ 국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·해소
- ◇ 지방발전·분권을 위한 규제 개선

국민편의 증진

- ◇ 생명·안전·환경 규제 관리 강화
- ◇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
- ◇ 규제 개선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

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·민주성 강화

3. 규제개혁 추진과제

① 미래 新산업 지원

①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

- 빠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규제체계의 민첩성과 유연성 확보 필요
 -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(원칙허용-예외금지) 개념을 확대하여 **포괄적 네거티브 규제**(사전허용-사후규제) 전환 추진
- (입법방식 전환) 법령개정 없이도 신제품·서비스를 수용하는 방식
 - △ 법령의 한정적·열거적 개념 정의 → **포괄적 개념 정의**
 - △ 제품·서비스 관련, 경직된 분류체계 → **유연한 분류체계**
- (혁신제도 도입)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, 신사업 시도가 가능토록 하는 방식
 - △ '**규제 샌드박스**' 도입, 혁신제품·서비스에 **시범사업·임시허가제** 도입
 - △ 필요시 **규제를 탄력적용**(면제·유예·완화)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 **규제샌드박스(Regulatory Sandbox)**: 어린이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(탄력적용) 신사업을 테스트(시범사업)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산업 육성 시 시도

②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

- 신산업·신기술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 발굴·정비하는 **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 구축**
- 우선, **자율주행차·드론·맞춤형 헬스케어** 대상으로 추진(부처 작업단 구성)
- '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마련 추진

③ 창업·벤처기업 규제 혁파

-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선별 등을 위해 벤처기업의 유형, 여건을 다양화하는 등 '**벤처기업 확인제도**' 개편
-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진입규제 개선 및 벤처기업 M&A 활성화 규제 개선, 중소기업 기술보호 규제 개선 등 추진

② 일자리 창출 지원

①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 개선

-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규제 애로 발굴·해소
→ 소규모 프로젝트 일지라도 **중소·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요구 우선 해결**
-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자리 관련 규제정비 사항 발굴 (일자리쫓와 협조)

②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 집중 해결

-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·공유경제 등 **新유형 서비스 활성화**를 가로막는 규제를 **선제적으로 발굴·해소**(‘18년)
- 관광, 교육, 금융, 콘텐츠, S/W, 물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규제혁파

③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

-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다음 4개 분야 규제 집중 개선(‘17~’18년)
 - △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·생활품·레저분야 △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
△ 장기간 독과점 고착화된 분야 △ 일자리 창출 효과 큰 서비스산업 분야

③ 민생부담 해소

① 소상공인·중소기업 규제부담 감면

-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 적용·(한시적)규제면제 (생명·안전규제 제외) 등 **규제 차등화 추진** (‘행정규제기본법’ 개정)
 -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규제 차등화 검토
- * 화평법 개정안 마련시(17.8월) 중소기업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배려 사례

② 국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·해소

- 국민생활의 불편이 큰 **5대 분야*** 중점 개선
 - * △ 보건·복지(‘17년下) △ 주거·건설 △ 도로·교통 △ 교육·보육 △ 문화·체육
- 이외 사회적 약자 차별, 부당대우 등 관련 규제민원 발굴·해소

③ 지방발전·분권을 위한 규제 개선

- (지역발전) '도시재생뉴딜사업' 지원 등을 위한 '舊도심·舊산단 등 낙후지역 재생' 관련 규제법령 우선 정비('17년下), 지역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분야 집중 정비('18년~)
- (지방이양) 지자체 건의과제(최근 3년간 1만여건) 분석*을 통해 핵심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, 국가법령 전수검토**를 통해 지자체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법령 대폭 정비
 - * 행안부, '국가사무 지방이양'('18년~)과 연계
 - ** 법제처, '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'('17.7월~)와 연계
- (자치법규 정비)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 추진,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게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(~'18년)

④ 국민편익 증진

① 생명·안전·환경 규제 관리 강화

- 생명·안전·환경 관련 규제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폐지·완화 시에도 규제심사를 실시 ('행정규제기본법' 개정)
 - *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이전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하여 실효성 확보
- 규제영향분석시 직접적 규제비용 외에도 사회적 비용·편익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 개발('17년下) 및 매뉴얼 개정('18년~)

②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 경감

- 국민과 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행정조사*(현재 26개 부처 690건)에 대해 금년중 △ 전수 실태점검 실시 △ 유형별 정비 방안 마련('17년)
 - *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,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
- 불필요한 자료제출 폐지·간소화, 조사 주기·횟수 축소, 부처간 공동조사 확대 등
- 중소기업 부담이 높은 업종·조사유형은 추가 정비방안 마련

③ 규제개선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

- 규제신문고* 제도를 개편, 기존 '의견제출' 권한을 '청구권'으로 확대하고, **3단계 검토절차의 법적 근거**를 마련 ('행정규제기본법' 개정)

* 총리훈령에 근거한 온라인 기반 국민대상 규제건의 처리시스템(14.3월),
민생관련 건의가 70% 이상, **3단계 검토 절차(부처답변→소명→개선권고)**

- 중앙부처,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국민의 규제개선 제안 접수·처리 창구를 **규제신문고로 단계적 통합**

* 중앙부처('17년)→광역단체('18년)→기초단체('19년)

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·민주성 강화

- 규개위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중소기업·여성·환경·소비자 등 분야별 위원 구성 다양화
- 규개위 투명성·민주성 확대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상세 공개, 규제심사 시 제척·회피제도 철저 적용, 위원 윤리규정 강화 등 추진

4. 향후 추진계획

- (추진체계)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'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'에서 수시 논의
 -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과제, 100대 국정과제 관련 규제개선 복합과제, 다부처 관련규제 등 중심으로 이견 조정·해소
 -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, 신산업·신기술 등 규제 혁파 등을 위해 일자리위원회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업무협조 체제 가동
- (법령 및 계획) 법령 개정 소요를 반영한 '**행정규제기본법**' 개정(안)을 마련, 연내 조속히 국회 제출
 - 제·개정이 필요한 부처 소관법령 신속 정비 독려 및 '17년 부처별 '**규제정비계획**'* 보완(9월)

* 18년 이후 매년 초 "규제정비종합계획" 마련 예정

(끝)